

# 아동인권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정책 분석 연구\*

김지영\*\* · 신현정\*\*\*

## 초 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17개 시·도교육청의 진로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을 아동권리 관점에서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2018년 진로교육법 시행령 개정 이후 진행해 온 시·도교육청의 주요 진로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자료를 교육부와 각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하고 문헌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진로개발역량 신장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생존권, 발달권 보장 관련 정책과 지역사회 인프라 연계의 체험 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참여권 보장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었다. 그리고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을 위한 진로교육 정책도 제시되어 있어 비차별의 원칙 관련 정책들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의 진로교육 정책은 주로 장애아동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진로교육에서 격차가 나타날 수 있고 진로장벽이 있을 수 있는 대상인 다문화가정 아동, 한부모가정 아동, 저소득층 아동,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에 대한 진로교육 정책이 미흡했다. 셋째, 아동 의견 존중과 아동 최선의 이익 보장 관련 정책이 미흡하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우리나라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에 있어서 아동권리의 질적인 면에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진로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서 아동의 의사결정 참여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아동의 삶과 연계된 진로교육을 통해 유의미한 진로교육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진로교육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차별 없이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수준을 넘어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진로발달을 위한 더 체계적이고 더 지속적인 진로교육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다양한 진로교육에 대한 그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둘째, 아동 의견을 반영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진로교육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진로교육 정책 시스템

\* 본 연구는 2023년 아동권리보장원의 지원으로 수행된 '2023년 아동정책영향평가 진로교육 정책 전문영향평가' 내용과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

\*\* 중부대학교 교직과 겸임교수(주저자) (E-mail: jykoklove@gmail.com)

\*\*\* 중부대학교 학생성장교육학부 부교수(교신저자) (E-mail: hjshin@joongbu.ac.kr)

투고일: 2024년 5월 21일, 수정일: 2024년 5월 27일, 게재확정일: 2024년 5월 29일

구축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진로교육 질관리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의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진로교육의 다양성과 질 제고를 위한 학교, 지역사회, 산업체, 학부모 등의 범사회적인 진로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주제어 :** 진로교육, 아동권리, 진로교육정책, 진로교육격차, 범사회적 거버넌스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급변하는 사회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등은 개인적, 국가적 차원에서 삶의 질 향상과 인적자원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진로교육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 및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는 아동·청소년의 진로개발 역량 및 진로 정체감을 신장시켜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교육격차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박연옥 외, 2017; 임선아, 2013). 이에 교육격차 해소 방안으로 진로교육 강화를 더더욱 요구하고 있다(강대중 외 2020; 황승우·서경혜, 2021).

그러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도서벽지 소재 초등학교 진로교육 환경과 교육 참여를 조사한 결과, 진로교육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었다. 즉 진로교육 계획, 예산, 진로전담교사 배치, 진로교육 부서 설치, 진로활동 운영, 진로수업 운영, 진로탐색 주간, 학부모 진로교육 연수 운영, 교과연계 진로교육, 진로체험,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에 관한 수치가 있어서 대도시 지역 학교가 중·소도시 지역 학교, 읍·면지역 학교에 비해서 약 1.5배~2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 차이가 있었다(장현진, 2018). 이와 같은 지역 간 진로교육 환경 및 교육 참여의 차이는 진로발달 및 학습에 영향을 미치며 진로교육 격차의 요인이 되고 있다. 진로전담교사도 전국적으로는 96.7%의 배치율을 보이고 있지만 대구는 97.6%인데 반해 전북은 66.8%에 그치고 있어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교육부, 2018).

이와 같은 진로교육 격차는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지속적인 진로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가 교육체제에서 교육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서상완, 2018; 장현진, 2019). 즉 초등학교 단계의 진로교육 학습경험은 진로개발 역량 함양 및 진로 정체감 형성에 격차를 유발하고, 이는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학습동기와 학업성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교육격차의 유발 요인이 된다(민현홍·김재호, 2014; 조효정·황매향,

2014; 한희원·문경숙, 2014). 따라서 미래사회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진로교육 격차를 줄이고 진로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진로교육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로교육 정책 현황을 진로교육의 수혜 대상이자 주체인 아동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엔에서는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한 18세 미만인 모든 사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 아동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진로교육 정책이 실현될 때 미래사회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과 교육격차 및 진로교육 격차가 해소될 수 있다. 우리나라 각 시·도교육청의 진로교육 정책 현황을 아동권리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도출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로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을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미래인재양성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진로교육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체계적인 진로교육의 활성화와 진로교육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UN 아동권리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CRC, 이하 UN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UN(United Nations; UN)에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인정하여 채택한 협약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 협약을 비준하였고,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은 이 협약에 기반을 두고 있다. UN 아동권리협약은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대 기본 원칙과 4대 기본 권리를 제시하고 있다. 4대 기본 원칙은 비차별(제 2조), 아동 최선의 이익(제 3조), 생존과 발달의 권리(제 6조), 아동 의견 존중(제 12조)이 해당된다. UN 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기본 원칙은 인권의 영역을 포함하여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는데, 이를 UN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 권리(기본권)로 제시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8).

### 2. 4대 기본원칙과 4대 기본권의 의미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채택된 UN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원칙과 4대 기본권이 담고 있는 의미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우리나라의 아동과 관련한 법과 정책은 이 협약에 기반

하여 제정되고 수립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표 1>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권리 관점에서 우리나라 17개 시·도교육청의 진로교육 관련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UN 아동권리협약 기본 원칙과 기본권

기본원칙	기본 원칙 내용	기본권	기본권 내용
비차별	모든 아동의 본인과 부모, 후견인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출신, 재산, 장애 여부, 태생, 신분 등과 관계없이 누리는 동등한 권리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향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아동 최선의 이익	아동에게 영향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 최우선으로 고려	보호권	모든 형태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함.	발달권	잠재능력 최대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 즐길 권리, 문화생활하고 정보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 누릴 권리
아동 의견 존중	아동이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음.	참여권	자기 생활에 영향주는 일에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 얻을 권리 등.

출처: UNICEF 홈페이지(www.unicdf.or.kr),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korea1391.go.kr)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우리나라 17개 각 시·도교육청에서 정보공개하고 있는 진로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는 교육부에서 2010년 1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2015년 진로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2016년 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2018년 진로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교 진로교육 정책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18~2022)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 진로교육법 시행령 개정 이후 진행해 온 시·도교육청의 주요 진로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들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문헌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 2. 분석 방법 및 기준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와 17개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는 진로교육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들을 아동권리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분석기준은 UN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기본원칙 및 기본권리이며,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분석 요소와 지표를 구안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아동권리 관점의 진로교육 관련 정책 분석 기준

분석기준	분석 요소	분석 지표
비차별 원칙	진로교육 기회	신체적·경제적·지역적 여건이나 배경 등에 의해 해당 정책을 계획·실행·운영하는 데 있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고 있는가
	진로교육 활동 참여	정책 대상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배제되는 아동이 존재하는가
	진로교육 프로그램 제공	정당한 근거에 따라 배제되는 아동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아동 최선의 이익	진로역량 강화 위한 아동권리 보장 고려	아동의 생애주기별 발달단계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가 아동의 진로개발 및 역량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고려하고 있는가
생존권 · 발달권 · 보호권	진로발달 역량 강화 기회제공	아동의 삶 영위에 필요한 사회적 필수 역량 발달을 고려하고 있는가
	직업 잠재능력 발달	아동의 미래 경제활동에 필요한 잠재능력 개발 및 직업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고려하고 있는가
	신체적, 정서적 안전성고려	아동이 부당·유해하거나 또는 위험한 경험 하지 않도록 고려하고 있는가
아동 의견 존중 · 참여권	진로교육정책 입안 시 수요자 요구반영 체계구축	정책 입안에 대한 아동·보호자·정책 관계자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가
	진로교육 정책 추진과정에 아동의 충분한 의견 반영	정책수립 및 추진과정에 아동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실제로 제공되는가, 해당 정책수립 및 추진과정에 아동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가
	진로교육 참여장벽 제거	진로교육에 아동의 참여 장벽이 존재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가

## IV. 연구 결과

우리나라 17개 각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해 아동권리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시·도교육청 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1. 서울시교육청

지역사회 연계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창의·융합적 진로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진로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본 연구 분석기준에 의한 분석결과, 비차별의 원칙,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 관련 정책을 실행하고 있었고 아동 의견 존중, 아동 최선의 이익이 보장 정책은 미흡하였다. 진로교육 격차 해소 및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을 위한 진로교육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다음의 <표 3>은 서울시교육청 진로교육 사례 및 아동권리이다.

<표 3> 서울시교육청 진로교육 사례 및 아동권리

진로교육 사례		아동 권리
진로직업 교육 (청진기 포함) (2019. 1)	<p>추진 배경 및 목적</p> <p>4차산업혁명 시대 창의융합 인재 육성 진로중심 교육과정 운영, 소질과 적성에 따른 학생 진로개발역량 증진, 개인 맞춤형 학교 진로교육 운영 풍토 조성,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 강화, 학생의 진로발달단계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진로 탐색 및 진로탄력성 함양 기회 확대, 지역사회 연계·협력 통한 진로교육 효과 제고</p> <p>중점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계적인 진로교육과정 운영 : 교과 연계 진로교육 및 진로활동 중심의 창의적체험활동 운영, 진로교육 연구·선도학교 운영, 학교진로활동실 구축·운영, 체험·협업 중심의 맞춤형 진로교육 실시, 꿈넙꿈 진로체험(진로특강 및 진로콘서트, 진로캠프, 전환기 진로체험) 운영, 서울 지역 특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장진로 직업체험(청진기) 운영, 진로체험박람회 운영,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체험박람회 운영, 특성화고 연계 진로체험 및 진로체험관 운영</li> <li>•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체제 구축 : 진로전담교사 운영, 진로교육 지원단 운영, 진로교육 연구활동 및 연수 지원, 25개 자치구별 진로 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li> </ul>	<p>생존권</p> <p>· 발달권</p> <p>· 참여권</p>

출처 : 서울시교육청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청구 정보목록

### 2.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체험 중심, 맞춤형 진로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정책 분석결과, 비차별의 원칙, 아동 의견 존중, 발달권, 참여권 보장 관련 진로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었다.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었으나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을 위한 진로교육 정책이 미흡하였고 진로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될 필요가 있다. 다음의 <표 4>는 부산시교육청 진로교육 사례 및 아동권리이다.

<표 4> 부산시교육청 진로교육 사례 및 아동권리

진로교육 사례		아동 권리
지자체와 함께 만드는 「진로교육지원센터」 구축 (2022, 2021, 2019)	추진 배경 및 목적	비차별의 원칙 · 발달권 · 참여권
	중점 내용	

출처 :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 3.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중심 진로교육 및 진로개발역량 함양을 위해 진로교육 기반조성, 체험중심 진로교육, 진로교육 역량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정책 분석결과, 비차별의 원칙, 발달권, 참여권 보장 관련 진로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었으나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을 위한 진로교육 정책이 미흡하였다. 진로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다음의 <표 5>는 대구시교육청 진로교육 사례 및 아동권리이다.

<표 5> 대구시교육청 진로교육 사례 및 아동권리

진로교육 사례		아동 권리
지역 특화 진로체험 프로그램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산업 연계형 진로체험처 활용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 지역산업 연계형 컨소시엄 구성 프로그램 진행, 섬유·패션·디자인, 의료·한방, 미래산업, 물 산업 등 대구 특화 산업 중심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컨소시엄 구성 통한 지역사회 연계형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일반화(꿈길 연동, 자유학년제 연계지원 확대)	참여권
진로 내비게이션	자기주도적 진로탐색·설계 프로그램 및 글로벌리더십과정 운영	발달권

출처: 대구광역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공개자료

#### 4.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진로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인천형 진로교육 시스템 구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탈북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었다. 정책 분석결과, 비차별의 원칙, 생존과 발달의 권리 보장 관련 진로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었다. 다음의 <표 6>은 인천시교육청 진로교육 사례 및 아동권리이다.

<표 6> 인천시교육청 진로교육 사례 및 아동권리

진로교육 사례			아동 권리
초·중·고 연계 인천형 진로교육 정책개발 (2021.1)	추진 배경 및 목적	미래사회 대비할 수 있는 진로핵심역량 토대로 인천시교육청의 철학 및 비전을 반영 진로교육 정책 개발, 인천을 기반으로 한 발달 단계별 초·중·고 연계 인천형 진로교육과정 개발 필요, 에듀테크를 활용한 인천형 진로교육 시스템 구축 필요	생존과 발달의 권리
	중점 내용	미래사회 대응의 인천형 진로교육 정책 개발, 초·중·고 학교급별 연계 위한 인천형 진로교육과정 개발,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 에듀테크 기반 비대면 진로교육 시스템 사이버 진로교육원 구축	

출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사업 공개

#### 5. 광주광역시교육청

맞춤형 진로교육과 중학교의 체계적인 진로교육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진로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세부 정책이 나타났다. 진로발달 면에서 불리한 여건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다양한 사회적 배려 대상 아동들에 대한 세부적 진로교육 정책이 추가되면 더 효과적인 진로교육 격차해소 정책이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 분석결과는 비차별의 원칙, 발달권 보장 관련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의견 존중, 아동 최선의 이익, 참여권 보장 관련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 다음 <표 7>은 광주시교육청 진로교육 사례 및 아동권리이다.

<표 7> 광주시교육청 진로교육 사례 및 아동권리

진로교육 사례			아동 권리
맞춤형 진로교육 (2022.7, 2021.7)	추진배경 및 목적	광주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학생들 꿈과 끼 키우는 행복한 진로교육 실현, 중학교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진로교육 강화	발달권
	중점 내용	광주형자유학기제 중학교 지원, 중학교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자유학기제 홍보 및 연수, 자유학기제 운영자로 배부 통한 자유학기 활동강화, 학교진로교육 활성화지원 및 기반조성, 진로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진로교육 역량강화	

출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 6. 대전광역시교육청

체험 중심 예술 활동 확대를 통한 진로 역량 강화와 지역대학, 지역기관들과 연계한 진로 체험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정책 분석결과, 발달권, 참여권 보장 관련 정책을 실행하고 있었다. 대전광역시교육청도 타지역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아동 의견 존중, 아동 최선의 이익과 관련한 정책 추진이 미흡하였으며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을 위한 세부적 정책 실행의 확대가 필요하다. 다음의 <표 8>은 대전시교육청 진로교육 사례 및 아동권리이다.

<표 8> 대전시교육청 진로교육 사례 및 아동권리

진로교육 사례			아동 권리
수요자 중심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2022. 7)	추진배경 및 목적	교육과정 내 학교예술교육 내실화 및 보편적 예술교육 책무성 증대 및 미래인재핵심역량인 심미적 감성과 조화로운 인성함양필요, 학생 적성과 진로에 맞는 체험중심 예술 활동 기회 제공 및 수요자 중심 예술활동 지원 확대를 통한 예술교육 만족도 제고와 사교육비 절감	발달권
	중점 내용	1교 1예술동아리운영, 학생예술심화동아리운영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 운영: 지역예술단체 20팀공모·선정, 운영학교 선정·지원	

출처 : 대전교육청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 7.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지역진로체험지원센터 연계 진로체험지원정책과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을 추진하고 있었다. 장애아동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에 대한 진로교육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그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 정책추진이 필요하였다. 정책분석 결과, 비차별의 원칙, 생존과 발달의 권리,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 관련 정책이 실행되고 있었으나 아동 의견 존중, 아동 최선의 이익 보장 관련 정책 확대가 필요하였다. 다음의 <표 9>는 울산시교육청 진로교육 사례 및 아동권리이다.

<표 9> 울산시교육청 진로교육 사례 및 아동권리

진로교육 사례			아동 권리
허브 연계 지자체 진로체험 지원센터 운영 (2020.06)	추진배경 및 목적	진로교육법 시행(2015.12.23.) 및 자유학년제 시행에 따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허브로 5개 구군 지방자치단체의 진로체험지원센터와 협력 다양한 진로교육 자원(물적·인적)을 활용한 학교 진로체험활동 지원 및 학생들의 진로탐색 기회 제공	발달권 · 참여권
	중점 내용	다양한 진로체험처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진로멘토링 운영 및 진로체험 매칭업무, 진로체험처 전수안전점검 및 진로체험활동 지원	

출처: 울산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중점관리대상사업 공개

## 8. 경기도교육청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 진로체험지원센터와 함께 지역 기반 미래 교육 생태계 연계 진로·직업교육을 추진하고 있었고, 장애아동, 학교 밖 청소년, 학생 선수, 농어촌지역 학생, 탈북 학생 등 진로교육 정책에서 소외될 수도 있는 대상에 대한 세부적 진로교육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었다. 경기도교육청은 타지역교육청보다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에 대한 진로교육 지원 정책이 세부적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정책 분석결과, 비차별의 원칙, 생존과 발달의 권리,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 관련 정책을 실행하고 있었다. 비차별의 원칙, 생존권, 발달권 보장 관련 정책은 많았으나, 경기도교육청 또한 아동 의견 존중, 아동 최선의 이익 보장 관련 정책은 미흡하게 나타났다. 다음의 <표 10>은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사례 및 아동권리이다.

<표 10> 경기도 교육청 진로교육 사례 및 아동권리

진로교육 사례			아동 권리
2022 경기 미래진로 직업박람회 진로직업교육 축제 (2022. 9)	추진배경 및 목적	중, 고등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탐색, 직업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진로직업교육 축제	발달권 · 참여권
	대상	고양,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의정부 등 6개 권역별 운영	
	중점 내용	고양,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의정부 등 6개 교육지원청이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진로체험지원센터와 함께 지역 기반 미래교육생태계와 연계한 진로직업교육 축제	

출처: 경기도교육청 정보공개 중점관리대상사업 공개

### 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진로교육 운영 내실화,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활성화,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체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특히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활성화 과제로 소외계층에 대한 진로교육 프로그램과 진로체험 격차 해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었다. 정책 분석결과, 비차별의 원칙, 생존과 발달의 권리,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아동 최선의 이익 보장 관련 정책을 실행하고 있었으나 아동 의견 존중 보장 관련 정책이 미흡하게 나타났다. 다음의 <표 11>은 강원도교육청 진로교육 사례 및 아동권리이다.

<표 11>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진로교육 사례 및 아동권리

진로교육 사례			아동 권리
진로체험 격차해소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목적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등 진로체험 기회 확대 지원, 계층·지역 간 진로체험 기회 격차에 따른 진로교육 사각지대 최소화,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신산업 분야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확대	비차별의 원칙 · 참여권 · 아동 최선의 이익
	대상	소외지역 소재 초, 중, 고교 학생, 학교 밖 청소년	
	중점 내용	- 지역격차 해소 위한 진로체험버스 : 소외지역 체험기관(멘토) 방문, 체험기관에 학생방문,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 지원 - 대학 인프라 활용 대학 진로탐색캠프 : 대학별 특성 반영 학과·직업 탐색프로그램 지원 - 온라인진로교육 지원 위한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 진로교육 사각지대 최소화 위한 소외지역(도서벽지 및 읍면지역 소재학교) 학생 온라인진로멘토링 제공	

출처: 강원도 진로교육 추진계획

## 10.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간, 지역 간 진로체험 격차 해소를 위한 진로탐색활동 지원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고 학생선수 진로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진로·직업교육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정책 분석결과, 비차별의 원칙, 생존과 발달의 권리, 생존권, 발달권 보장 관련 정책이 실행되고 있었다. 충청북도교육청도 타지역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아동 의견 존중, 아동 최선의 이익 보장 관련 정책이 미흡하였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에 대한 세부적인 진로교육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 다음의 <표 12>는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사례 및 아동권리이다.

<표 12> 충청북도 교육청 진로교육 사례 및 아동권리

진로교육 사례			아동 권리
시민.인권 교육 (2018. 4)	추진배경 및 목적	노동과 인권에 대한 교육주체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 유도, 초·중·고, 학교 밖 청소년까지 노동인권 감수성 교육확대, 노동인권교육 역량제고 및 민주시민 감수성 함양지도 강화,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위한 학생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자료 개발 보급	생존권 · 발달권
	중점 내용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단계형 교육 확대, 발달 단계별 노동인권 교육자료 개발·보급	

출처: 충청북도교육청 정보공개 중점관리대상사업 공개

## 11.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진로융합교육원을 개원하고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각급학교 진로활동실을 구축하여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 운영 기반을 확충하고 있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진로교육 격차 해소에 관한 정책과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에 대한 정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정책 분석결과, 발달권과 아동 최선의 이익 보장 관련 정책이 실행되고 있었다. 다음의 <표 13>은 충청남도교육청의 진로교육 사례 및 아동권리이다.

<표 13> 충청남도 교육청 진로교육 사례 및 아동권리

진로교육 사례			아동 권리
충청남도 교육청 진로융합 교육원 설립 (2021. 8)	추진배경 및 목적	진로교육 중요성 반영해 5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로교육’ 설정 및 교과 원리 연계 다양하고 깊이 있는 창의융합교육과 진로교육 내실화 위한 중심역할 기관 설립 필요,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 진로교육 내실화, 현실문제를 다양한 역할로 해결하는 창의융합교육 구현, 미래사회 대비, 생각하는 힘 키우는 참학력실현	발달권
	중점 내용	-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 2022년 개관( 충남 홍성군 홍북읍 신정리 591-2) - 규모: (부지) 29,840㎡ (건축연면적) 9,848.76㎡	

출처: 충청남도교육청 정보공개 중점관리대상사업 공개

## 12. 전라북도교육청

지역사회 인프라 및 지역 인재 활용 맞춤형 진로·직업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었고 학부모 진로지도 역량 강화 프로그램, 학생 참여형 진로탐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진로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또한 다문화학생, 북한이탈학생 등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에 대한 세부적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정책 분석결과, 비차별의 원칙,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 최선의 이익, 발달권, 참여권 보장 관련 정책이 실행되고 있었으나 아동 의견 존중 보장에 관한 정책은 미흡하였다. 다음의 <표 14>는 전라북도 교육청의 진로교육 사례 및 아동권리이다.

<표 14> 전라북도 교육청 진로교육 사례 및 아동권리

진로교육 사례			아동 권리
다문화 고교생 진로체험 기회제공 (2022.6)	추진배경 및 목적	다문화가정 고등학생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지원 위한 ‘2022 다문화가정 고등학교 글로벌 진로캠프’ 운영, 진로캠프는 다문화가정 고교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정보 안내해 자기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선택 기회 지원 목적	비차별의 원칙 · 발달권
	대상	다문화가정 고등학생	
	중점 내용	지문 직업적성검사, 응급처치능력 함양, 학과진로체험, 진로코칭, 레크리에이션, 글로벌사회 인재와 직업, 진로전공체험, 진로페스티벌, 함께하는 진로로드맵 만들기	

출처 : 전라북도교육청 보도자료

### 13. 전라남도교육청

권역별 진로진학상담센터를 구축하여 학생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진로·진학·직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학부모 진로·진학지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진로담당교원 및 진로코디네이터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장애학생, 다문화학생, 북한이탈학생 등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에 대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고 특히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었다. 정책 분석결과, 비차별의 원칙,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 최선의 이익, 발달권, 참여권 보장 관련 정책이 실행되고 있었으나 아동 의견 존중 보장에 관한 정책은 미흡하였다. 다음의 <표 15>는 전라남도교육청의 진로교육 사례 및 아동권리이다.

<표 15> 전라남도 교육청 진로교육 사례 및 아동권리

진로교육 사례			아동 권리
5개 권역별 진로진학 상담센터 구축 (2022.11)	추진배경 및 목적	학생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진학 지도	발달권 · 아동 최선의 이익
	중점 내용	목포, 순천, 여수, 광양, 나주 등 5곳에 구축, 목포(무안 신안 해남 완도 진도 강진 영암)와 순천(보성 장흥 곡성 구례 고흥), 나주(함평 영광 장성 담양 화순) 거점형, 여수와 광양 독립형 센터로 운영, 학생들의 체계적 학습 상담 및 관리, 개인별 맞춤형 진로·진학·직업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권역별 센터 접 근성 강화, 학부모, 학생이 원하는 시간, 주제에 맞는 수요자 중심 상담 제공, 진로진학지도 위한 대입지원관과 진로진학상담사 배치, 토요일까지 상시 운영, 주중 야간상담 진행. 수시·정시 대학입시 기간 센터별 상담교사단 인력풀 이용 상담 계획	

출처 : 전남교육통(<https://www.jnedu.kr>)

### 14. 경상북도교육청

지역사회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었고, 다문화학생,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체험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었다. 정책 분석결과, 비차별의 원칙, 생존과 발달의 권리, 발달권, 참여권 보장 관련 정책이 실행되고 있었으나 타지역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아동 의견 존중, 아동 최선의 이익 보장과 관련한 정책이 미흡하게 나타났다. 다음의 <표 16>은 경상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사례 및 아동권리이다.

<표 16> 경상북도 교육청 진로교육 사례 및 아동권리

진로교육 사례			아동 권리
지역사회 함께하는 진로교육 (2019.12)	추진배경 및 목적	4차 산업혁명 기술발전과 직업세계 변화 등으로 인해 실질적 진로문제에 노출된 학생들에게 삶의 힘 길러주는 진로교육을 다양하게 운영	발달권 · 참여권
	대상	도내 초·중·고등학생 15여만명	
	중점 내용	대학전공 체험, 직업인 특강, 현장견학, 직업체험, 진로캠프 등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 활용 진로체험, 23개 지역 교육지원청 중심 진로캠프 실시, 1만 명 이상의 학생 참석, 캠프에서는 내고장 직업인 초청 특강, 지역 대학 초청 전공 체험, 또래가 함께하는 진로캠프 등 실시	

출처: 경상북도교육청 미디어포털 보도자료

## 15. 경상남도교육청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의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 플랫폼 구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고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기반 진로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정책 분석결과, 아동 최선의 이익 보장 관련 정책이 실행되고 있었다. 다음의 <표 17>은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사례 및 아동권리이다.

<표 17> 경상남도 교육청 진로교육 사례 및 아동권리

진로교육 사례			아동 권리
경남형 진로교육 지원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2022.11)	추진배경 및 목적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인재 양성 위한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 플랫폼 구축 필요,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위한 경남형 진로교육 지원플랫폼 단계별 이행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아동 최선의 이익
	중점 내용	진로교육 관련 데이터 환경 및 현황 조사분석 등 통한 플랫폼 구축 방향 도출, 경남형 진로교육 특화 데이터 확보 방안 수립, ‘아이톡톡’과 연계한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능 개발 통합 관리 방안 수립, 플랫폼 구축 관련 정보화 투자 예산 산출 및 정량적·정성적 기대효과 분석	

출처: 경상남도교육청 정보공개 중점관리대상사업 공개

## 16.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지역사회 인프라 및 인력 연계 진로교육 프로그램과 장애학생, 다문화학생, 탈북가정학

생, 학생선수 등 진로교육에서 소외될 수도 있는 대상에 대한 진로교육 정책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또한 학부모 진로교육과 문화, 예술, 미용, 이공계 등 다양한 분야의 진로 체험을 지역사회 인프라와 연계해 진행하는 진로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정책 분석 결과, 비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의 권리, 발달권, 참여권 보장 관련 정책이 실행되고 있었다. 다음 <표 18>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사례 및 아동권리이다.

<표 18>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진로교육 사례 및 아동권리

진로교육 사례			아동 권리
도교육청, 제주의 색깔을 찾아가는 독특한 진로체험 (2020.12)	추진배경 및 목적	대규모 일회성으로 그치는 진로체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교육(학급 단위 안전교육 및 멘토 만남 준비 과정) → 진로 체험(각 주제 관련 탐방 및 체험, 멘토 인터뷰) → 사후활동(활동 경험 나눔 및 워크북 작성)’으로 모듈화하여, 현장과 밀착되고 학생들은 체계적 진로탐색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	발달권 · 참여권
	대상	도내 읍면 중학교 10개교 30학급 714명	
	중점 내용	제주 자연과 역사 자원 활용해 관광·친환경·제주어를 주제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군 소개와 체험을 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공개

## 17.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세종시 진로교육전담교사 중심 진로교육지원단 운영과 세종시 진로교육원을 통한 지역사회 인프라 및 인력 연계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었다. 또한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진로상담 및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 진로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로교육에서 소외될 수도 있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세부적인 진로교육 정책은 대체적으로 미흡하게 나타났다. 정책 분석결과, 아동 최선의 이익, 발달권, 참여권 보장 관련 정책이 실행되고 있었다. 다음 <표 19>는 세종시교육청 진로교육 사례 및 아동권리이다.

<표 19> 세종시 교육청 진로교육 사례 및 아동권리

진로교육 사례			아동 권리
2022 진로교육 지원단 운영 (2022.4)	추진배경 및 목적	학교 현장 중심 진로 교육 활성화, 학교 현장 심층적 온-오프라인 진로상담 만족도 강화, 효율적 진로교육 지원, 2023년 상반기 개원 예정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원 운영 프로그램 개발 목적	아동 최선의 이익
	대상	세종시 진로 전담교사단(33명)	

진로교육 사례		아동 권리
중점 내용	자기진로이해와 실질적 진로설계 및 진로탐색 위한 다양한 정보 및 자료 지원, 진로이해 지원팀 교육청 방문 및 온라인 상시 상담, 진로설계 희망하는 초 5~6, 중1~2학년 학생, 학교 밖 청소년과 학부모 대상 진로상담 실시, 진로설계 지원팀 진로 플래너 개발과 진로 집중학기 및 고교학점제 관련 진로 교육 우수사례 발굴, 자료 개발, 진로교육원의 진로도서관 및 진로 체험실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콘텐츠, 우수사례 수집, 분석·연구 활동 진행	

출처: 세종시교육청 미디어포털 보도자료

이상으로 아동권리 관점에서 17개 각 시·도교육청의 주요 진로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20>과 같다.

<표 20> 아동권리 관점의 시·도교육청 진로교육정책 분석 결과

교육청	정책 추진 방향	주요 보장 아동권리	보완 필요 아동권리
서울시	- 지역사회 연계 맞춤형 진로교육 - 창의·융합적 진로역량 함양	비차별의 원칙,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아동 의견 존중, 아동 최선의 이익
부산시	-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관련 진로교육 활성화 - 체험 중심, 맞춤형 진로교육	비차별의 원칙, 발달권, 참여권 아동 의견 존중,	아동 최선의 이익
대구시	- 학생 중심 진로교육 - 진로개발역량 함양 위한 교육기반조성 - 체험중심 진로교육	비차별의 원칙, 발달권, 참여권	아동 의견 존중, 아동 최선의 이익
인천시	- 인천형진로교육시스템 구축 -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비차별의 원칙,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 의견 존중, 아동 최선의 이익
광주시	- 맞춤형 진로교육 - 중학교의 체계적인 진로교육 강화 - 진로발달 불리한 여건 학생들 대상 다양한 교육지원	비차별의 원칙, 발달권	아동 의견 존중, 아동 최선의 이익
대전시	- 체험 중심 예술 활동 확대 통한 진로역량 강화 - 지역대학, 지역기관 연계 진로체험 지원	발달권, 참여권	아동 의견 존중, 아동 최선의 이익
울산시	- 지자체, 지역진로체험지원센터 연계 진로체험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지원	비차별의 원칙, 생존권, 생존과 발달의 권리, 발달권, 참여권	아동 의견 존중, 아동 최선의 이익

교육청	정책 추진 방향	주요 보장 아동권리	보완 필요 아동권리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진로체험지원센터 연계 지역 기반 미래 교육</li> <li>- 생태계 연계의 진로·직업교육</li> <li>- 다양한 진로교육 소외 학생 대상 세부적 교육 지원</li> </ul>	비차별의 원칙, 생존과 발달의 권리,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아동 의견 존중, 아동 최선의 이익
강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진로교육 운영 내실화</li> <li>-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활성화</li> <li>-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체제</li> <li>- 소외계층 진로교육, 진로체험 격차해소</li> </ul>	비차별의 원칙, 생존권, 생존과 발달의 권리, 발달권, 참여권, 아동 최선의 이익	아동 의견 존중
충청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지역 간 진로체험격차해소 진로탐색 활동 지원</li> <li>- 진로교육 소외학생의 노동인권교육, 진로·직업 교육강화</li> </ul>	비차별의 원칙, 생존권, 생존과 발달의 권리, 발달권	아동 의견 존중, 아동 최선의 이익
충청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교육 내실화</li> <li>-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 운영기반 확충</li> </ul>	아동 최선의 이익, 발달권	아동 의견 존중
전라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인프라, 지역인재 활용 맞춤형진로·직업 체험교육</li> <li>- 학부모 진로지도 역량 강화</li> <li>- 학생 참여형 진로탐험 지원</li> <li>-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 진로교육 지원</li> </ul>	비차별의 원칙,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 최선의 이익, 발달권, 참여권	아동 의견 존중
전라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진로·진학·직업 지원</li> <li>- 학부모 진로·진학지도 역량 강화</li> <li>- 진로담당교원, 진로코디네이터 역량 강화</li> <li>-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 진로교육 지원</li> </ul>	비차별의 원칙, 발달권, 참여권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 최선의 이익,	아동 의견 존중
경상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연계 진로체험</li> <li>-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 진로체험 및 직업교육 지원</li> </ul>	비차별의 원칙, 발달권, 참여권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 의견 존중, 아동 최선의 이익
경상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맞춤형 진로교육 지원 플랫폼 구축</li> <li>-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기반 진로교육</li> </ul>	아동 최선의 이익, 발달권	아동 의견 존중
제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인프라 및 인력 연계 진로교육</li> <li>- 진로교육 소외 학생 대상 세부적 진로교육 지원</li> <li>- 학부모 진로교육</li> </ul>	비차별의 원칙, 발달권, 참여권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 최선의 이익,	아동 의견 존중
세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인프라 및 인력 연계 진로교육</li> <li>- 학부모 진로교육</li> </ul>	아동 최선의 이익, 발달권, 참여권	아동 의견 존중

## V. 결론

### 1. 요약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 시·도 교육청에서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 관련 진로교육 정책을 제시하고 있었다. 아동의 진로개발역량 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생존권, 발달권을 보장하는 정책과 지역사회 인프라 연계 체험 중심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참여권을 보장하는 정책도 제시되고 있었다.

둘째, 시·도교육청 별 차이는 다소 나타났지만 비차별의 원칙 관련 정책들이 제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을 위한 진로교육 정책들이 제시되어 있었으나 장애아동에 대한 진로교육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었다. 진로교육의 격차가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 즉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아동,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진로교육 정책이 더욱 세부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셋째, 대부분 시·도 교육청에서 아동 의견 존중과 아동 최선의 이익 보장 관련 진로교육 정책이 미흡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교육 정책 수립과 교육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서 아동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아동의 의사결정 참여 기회가 제공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아동 의견 존중과 아동 최선의 이익, 참여권이 보장되는 진로교육이 될 수 있다. 진로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아동의 의사결정 참여 기회 보장 정책은 진로교육 관점에서 발달권,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도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들에 대해서도 그들에 맞는 진로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 정책 수립 및 기획에 대해 의견을 묻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제공되는 정책이 마련됨으로써 비차별의 원칙과 참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진로교육의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한 진로교육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시·도 교육청 진로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에 있어서 아동권리가 보장되고 있으나 질적인 면에서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형식적인 면에서 정책 및 학습 내용, 운영방식에 대해 아동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 개개인의 삶에서 진로역량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고 아동의 삶과 연계된 진로교육을 통해 유의미한 진로교육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진로교육 정책 수립·집행·평가가 진행되어야 한다. 진로교육은 일반 교과과정처럼 표준화된 일관성보다 각각의 아동에게 맞춰진 개별성을 존

중해야 한다. 개별화된 진로교육은 아동이 자신의 진로목표를 더 잘 설정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자신의 미래 관련 결정에 대한 자신감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더 만족스러운 진로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 개별화된 진로교육을 위해서는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더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대상은 장애아동이나 학교밖 청소년, 그리고 다문화 아동과 같이 진로개발에 있어 일반아동들에 비해 진로발달의 장벽을 더 많이 가진 아동들이다.

우리나라 시·도교육청의 진로교육은 기본적으로 비차별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소극적 보장에 그치고 있어 충분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일반아동과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에게 동등한 진로교육 기회를 주는 것에 만족하기보다 이제는 각 아동이 처한 상황에 따라 혹은 진로개발 요구에 따라 좀 더 적극적인 진로교육의 권리 보장을 고려해야 할 때이다. 즉 차별 없이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진로발달을 위한 더 체계적이고 더 지속적인 진로교육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진로교육에 대한 그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진로 경험 부족으로 인한 진로개발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 개인이 처한 상황과 여건에 부합하는 개별형 진로교육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진로교육에 있어 비차별 원칙의 적극적 보장은 아동 간 진로교육 격차 해소에 대한 가장 빠른 해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아동 의견을 반영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진로교육 정책, 사업,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진로교육 정책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진로교육 정책 시스템을 통해 아동 및 현장전문가들이 여러 부처에서 진행되는 진로교육 정책, 사업 및 프로그램에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접근성을 강화하며,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체계적인 진로교육의 질관리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의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아동안 명의 진로개발이 국가의 존속과 미래와 더 깊은 연관성을 갖게 되었다. 이제는 진로교육의 수혜자인 아동뿐만 아니라 진로교육과 관련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진로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기반으로 한 진로교육 역량을 향상시켜야 할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교육을 제공하는 측과 교육을 제공받는 측의 진로개발 역량이 동반성장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로교육은 최대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진로교육의 다양성과 질 제고를 위한 학교, 지역사회, 산업체, 학부모 등의 범사회적인 진로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 3. 제언

우리나라 진로교육 관련 정책에 있어서 아동권리 보장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아동 개인에 따른 진로교육 격차는 진로역량 발달 및 교육격차 심화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장애아동의 진로발달에 있어서는 개별화된 정책적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정 아동, 학교밖 청소년, 한부모가정 등이 증가하고 있는 교육 현장을 감안한다면 다양한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들에 대한 아동권리 관점의 진로교육 정책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정책에 대해 아동권리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연구의 대상이나 방법에 제한이 있었다. 추후 양적연구 또는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다양한 진로교육 정책 대상에 대해 아동권리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강대중·김경애·김미윤·김차명(2020). 코로나19, 한국 교육의 잠을 깨우다. 서울: 지식공작소, 교육부(각시도교육청). <https://www.moe.go.kr>
- 국가인권위원회(2018). 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민현홍·김재호(2014). 자기주도적 진로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실과교육연구. 20(1). 한국실과교육연구학회. 105-125.
- 박연옥·박수진·허정(2017).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취업진로연구. 7(2). 한국취업진로학회. 103-124.
- 서상완(2018). CIPP평가모형을 적용한 자유학기제의 진로체험활동 평가척도 개발,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서울.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http://www.korea1391.go.kr>
- 임선아(2013). 진로정체감이 성취목표,몰입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관계의 경로분석. 청소년학연구. 20(1). 한국청소년학회. 47-68.
- 장현진(2018). 초등학교 소재 지역에 따른 진로교육 격차.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0(1). 한국농산업교육학회. 125-149.
- 장현진(2019).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개인, 가정, 학교 및 진로활동 경험의 영향. 진로교육연구. 32(2). 한국진로교육학회. 43-64.
- 조효정·황매향(2014). 직업체험중심 진로프로그램이 초등학교 학습부진아의 진로성숙도 및 학 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15(4).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85-312.
- 한희원·문경숙(2014). 중학생의 자기조절학습을 매개로 한 진로정체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종합연구. 12(4). 교육종합연구원. 25-42.
- 황승우·서경혜(2021). 코로나19시대 교육불평등 해소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과학연구. 52(4).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179-207.
- UNICEF 홈페이지. <http://www.unicdf.or.kr>

## ABSTRACT

# A Study on Career Education Policy Analysis of Korea's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ren's Rights

Kim, Ji-Young\* · Shin, Hyun-Jung\*\*

\*Professor, Joongbu University(First author)

(E-mail: jykoklove@gmail.com)

\*\*Professor, Joongbu University(Corresponding)

(E-mail: hjshin@joongbu.ac.kr)

This study examined the career education policies and programs of Korea's 17 city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ren's rights and attempte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Accordingly, data on major career education policies and programs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implemented after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areer Education Act in 2018 were collected through the website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each office of education, and the study was conducted using literature research method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policies were being promoted to guarantee the right to life and development by providing programs to strengthen career development capabilities, and policies to guarantee participation rights through career education linked to community infrastructure and experience-based career education. In addition, career education policies for children subject to social consideration were proposed, and policies related to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were also being promoted. Second, the career education policy for children subject to social consideration was mainly composed of program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re was an insufficient career education policy for children from various social considerations who may have career barriers and career gaps, such as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children from single-parent families,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and out-of-school youth. Third, policies related to respecting children's opinions and ensuring children's best interests were found to be lacking.

Therefore,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 more careful approach to the qualitative aspects of children's rights is needed in the career education policies and programs of Korea's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career education policies, opportunities for children to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must be provided, and career education policies must be improved so that meaningful career education outcomes can be achieved through career education linked to children's lives. Beyond guaranteeing the right to receive career education without discrimination, a more systematic and continuous career education system must be established for the career development of those subject to social consideration, and access to a variety of career education must be dramatically expanded. Second, we must recognize the need for a career education policy that reflects children's opinions and guarantee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and establish and operate a systematic career education policy system for this purpose. In order to systematically manage the quality of career education, a change in the perception of career education among all members of our society must take precedence. In order to improve the diversity and quality of career education, career education governance must be established throughout society, encompassing schools, communities, industries, and parents.

**Keywords :** Career Education, Children's Rights, Career Education Policy,  
Career Education Gap, Pan-Social Governance